



4면

여성·복지단체·어린이집연합회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전주매일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음 12월 28일) 제2715호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위기업종에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총 152억 긴급 수혈

영업용·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전액 감면'
PC방·공연장 등 9개 영업제한 업종에 50만원씩 지급
학진자 방문 공개 업소·문화예술인 등도 지급 대상

전주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 총 152억3,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3월 4만여 명의 시민에게 52억7,000원씩 지급했던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8월과 11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유흥시설 5종에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9개 영업제한업종 ▲학진자 방문 공개 업소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등이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기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3월 고지서 발급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시는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학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는 지급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는 100만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됐으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 절반인 50만원만 지급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시기로 한 것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시가 직권으로 100% 감면해 주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 3,0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11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원으로 마련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사진 오른쪽)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6,000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한 것"이라며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4·3 특별법 2월 국회 처리를"

진실규명 등 위해... 시도지사협, 공동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8일 '제4·3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제4·3 생존 희생자가 대부분 80세를 넘어 101세가 되는 분은 물론, 1세대 유족 1만 4,500명도 고령으로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 등으로 진정한 과거사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추진하게 됐다.

제4·3은 다른 과거사와 달리 진상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대통령령의 공식 사과와 문재인 정부 공약 100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제4·3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9만 4,985명의 4·3 희생자와 유족을 확정했지만, 입법의 부재로 배·보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보상하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

송 지사는 "제4·3은 대한민국 헌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냉전과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올해 73주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은 아픈 역사'임을 강조하며,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부안 하서면 위치
초등 3곳 '통폐합'

백련·장신·하서초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 부지는 '장신초'로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부안 하서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교(백련초, 장신초, 하서초)가 통합, 2024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이다. 학교명은 '가칭' 하서초등학교로, 현 장신초 부지에 일반 7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으로 들어선다.

지난 2019년 8월 13일 하서면 3개교 통·폐합 관련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11월 29일 의견조사 결과 107명 중 96명이 찬성, 89.7%가 동의했다.

이후 2020년 3월 1일 장신초와 백련초가 통합 운영됐고, 7월 14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중 학교별 3명 추천, 지역교육청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하서면 3개교 통합협의체를 출범했다. 12월 16일 제4차 통합협의체 회의에서 통합학교 부지를 '장신초'로 확정했다.

장신초 부지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하서면 중앙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30번 국도 및 705 지방도와 가까워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 또한 현재 휴교중으로 공사기간 동안 소음, 분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개교할 때까지 학습 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3개교 중 건물 노후도가 가장 적어 예산소요액이 적고, 주변에 민가가 없어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소지도 적다는 점이다.

통폐합 추진배경으로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하서면 초등학교 3개교 통폐합 관련 학부모 요구 및 지역사회현안 해결 등이다.

한편, 김 교육감의 주된 공약 중 하나인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장은성 기자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